

극저출생 현상의 미시경제학

김희삼 (광주과학기술원 기초교육학부 교수)

■ 요약 ■

세계 최저 수준의 극저출생이 지속되고 있는 현상을 미시경제학적 시각으로는 출산에 관한 개인 차원의 합리적 선택이 집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효용함수 측면에서 출산의 경제적 동기는 양육 및 노후 부양 규범의 변화로 크게 쇠퇴했으며, 사회 규범을 좇는 사회적 동기도 비혼과 비출산의 확산과 함께 약화되었다. 2세를 낳고 싶은 자연적 동기는 출산과 양육의 고비용 구조로 인한 예산제약으로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향후 극저출생 대책은 효용함수 측면에서 자연적 동기의 실현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춰 가족과 상대 성별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과 인식을 통해 새로운 가정이 형성되는 것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예산제약 완화를 위해 출산의 기회비용과 고비용·고강도 양육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직장 및 가정 내에서의 성평등과 효율적 분업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 이 글은 필자의 개인적 견해로, 본 연구소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저인 0명대 합계출산율을 2018년부터 나타내고 있으며, 매년 최저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1970년 101만명이었던 출생아 수도 50년만에 20만명대로 격감했다. 이러한 극저출생 현상은 한국 사회의 지배적인 삶의 방식, 혹은 사회 그 자체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극저출생 현상에 대해 경제주체의 선택이라는 미시경제학적 관점으로 그 원인을 설명하고, 그에 따른 대응방향을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저출생의 거시적 파급효과에 대한 논의나 다른 각도의 인식, 예컨대 인구 감소에 대한 일반적 우려와 달리 경쟁이나 환경에 미칠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시각 등은 논외로 한다. 또한 개인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구조, 예컨대 노동시장 격차와 수도권 집중 구조의 변화와 같은 근본적인 개혁 논의도 여기서는 다루지 않는다.

합리적 선택의 집합적 결과로서 극저출생

인간을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거나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경제주체로 간주해보자. 물론 그렇게 하지 않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도 흔하다. 그런데 결혼이나 출산과 같이 향후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중요한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사람이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 애쓴다고 보는 쪽이 타당할 것이다. 이 경우, 경제주체로서 출산에 관한 의사결정은 자녀로부터 얻는 효용과 자녀에게 드는 비용을 비교한 선택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지금의 극저출생 현상은 출산에 관한 개인 차원의 합리적 선택이 집합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효용함수 관련 원인:

출산의 자연적·경제적·사회적 동기와 그 변화

자녀로부터 얻을 수 있는 효용은 다양하다. 그 효용의 원천에 따라 출산의 동기를 자연적 동기, 경제적 동기, 사회적 동기로 구분해보

자.1) 먼저 자연적 동기는 남녀가 낭만적 사랑이나 부부관계의 형성에 의해 임신하여 자신들을 닮은 자녀를 낳고, 자녀와 정서적으로 교감하며, 자녀의 성장을 곁에서 지켜보는 행복감을 느끼고 싶은 마음이다. 출산이 계획된 경우가 아니라 충동적 행위의 결과라고 하더라도 그것 자체를 출산의 자연적 계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 동기는 자녀가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개인, 부부, 또는 가족 전체의 관점에서 경제적으로 득이 된다고 인식하는 경우에 작용하는 출산 동기다. 전통적 농경사회에서는 가족 중심의 안정적인 노동력 확보가 중요했고, 먹이고 입히는 것 외에 자녀에 대한 지출이 많지 않아 자식은 가족 단위의 생산을 늘리는 존재였다. 더욱이 유교적 가부장제 하에서 노부모가 임종 때까지 장남 중심의 직계 비속 가족과 동거하는 사적 부양 규범이 작동하던 시절에는 자식이 노후대비수단으로 인식되었다.

사회적 동기는 사회적 규범이나 관습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마음 또는 부모를 비롯한 친족 집단의 기대나 주변 사람의 시선에 대한 의식으로부터 갖게 되는 출산 동기다. 흔히 결혼 적령 및 출산 적령과 같은 연령 규범이 결합되며, 명절에 친척들이 모였을 때 미혼 남녀, 무자녀 부부에 대한 집안 어른들의 덕담이나 잔소리 형태로 전이된다.

그런데 이들 중 출산의 경제적 동기와 사회적 동기는 크게 또는 상당히 약화된 상황이다. 우선 경제적 동기의 변화를 짚어보자. 노후소득이 마련될 수 있는 세 가지 원천은 가족(사적 부양), 저축 및 자산 형성(자구책), 연금 및 공공부조(공적 부양)라고 할 수 있다. 이 중 자식에 의한 사적 부양 규범이 크게 약화되고 자구책(경우에 따라 고령 근로 포함)

1) 세 가지 동기 구분은 서형수(2022. 인구변화와 대응.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발표자료)를 참조한 것이다. 서형수는 출산에 관한 세 가지 동기로 구성된 기존 보상체계의 작동이 정지된 것으로 보고, 새로운 보상체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필자는 새로운 보상체계의 생성 가능성을 상상하기 앞서 기존 보상체계 중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남아 있는 출산 동기를 찾고자 했다.

과 공적 부양(공적 연금 성숙과 기초연금 확대)의 비중이 커져왔다. 핵가족화로 자식과 동거하는 노부모의 비율이 줄어들고 수명 연장이 겹쳐져 독거 노인이 증가해왔다. 관습과 상속을 매개로 한 장남 중심의 부양은 옛말이 되었다. 반면 육아와 교육에 드는 비용과 기준이 높아지면서 자녀 양육비가 급증함으로써 출산의 경제적 동기는 거의 사라졌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한편 사회적 동기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떤 가치관이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세계가치관조사(WVS)의 설문 항목들을 바탕으로 구성된 세계문화지도 상에서 한국은 매년 생존적 가치관(물질주의)과 세속적 가치관(사적 합리성)이 조합된 나라로 분류된다. 생존적 가치관은 경제적·물질적 안정을 중시하며 상대적으로 자기 민족 중심적인 사고와 낮은 수준의 사회적 신뢰 및 포용을 나타내는 경향으로, 북유럽국가에 지배적인 자기표현적 가치관, 즉 환경보호, 외국인 및 성소수자 포용, 성평등, 경제·정치적 의사결정 참여 요구 증대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는 경향과 대조된다. 그리고 세속적(합리적) 가치관은 개인주의, 사생활, 합리성을 우선하는 경향으로, 종교, 관습, 공동체, 집단을 중시하는 전통적 가치관과 대조된다. 한국인의 생존적 가치관은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환경과 맞물려 결혼이나 자녀보다 일과 경력을 우선시하도록 했다. 또한 친족, 이웃 등 혈연과 지역을 기반으로 했던 공동체의 약화는 전통적(집단주의) 가치관에 기반한 출산의 사회적 동기를 약화시켰다. 나이가 차면 당연히 결혼을 해야지, 결혼을 하면 마땅히 아이를 낳아야지와 같은 집안 어른의 압력과 주변 시선의 영향이 감소한 것이다.

2003년 한국종합사회조사(KGSS)와 2002년 국제사회조사기구(ISSP) 자료를 통해 가족 가치관을 국제비교한 결과, 그 당시 한국인의 가족 관련 가치관은 여전히 매우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경향을 보였다.²⁾ 이는 세계가치관조

사에서 한국인의 가치관이 생존적(↔자기표현적) 가치관과 세속적·합리적(↔전통적) 가치관의 조합으로 나타난 것과 비교된다. 이에 따라 개인으로서 여성에게 보장된 자유·평등·자기실현 기회가 결혼 후 가족과 친족집단 내의 가구원·모성에게는 보장되지 않아 특히 여성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출산의 자연적 동기는 여전한가? 혼외 출산이 희박한 한국 사회이기에 출산 이전에 결혼 의향에 대한 파악이 중요하다. 필자가 2017년에 한국·중국·일본·미국 4개국 대학생 각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³⁾ 한·중·일 동아시아 3국 청년의 결혼 의향(5점 척도)은 미국(남성 4.02, 여성 4.27)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한국은 남성의 결혼 의향(3.68)은 동아시아 3국 중에서는 가장 높았으나(중국 3.58, 일본 3.39), 여성의 결혼 의향(3.15)은 가장 낮았다(중국 3.29, 일본 3.62). 만약 결혼을 한다면 희망하는 자녀 수에 대해서도 유사하게 미국(남성 2.04명, 여성 2.18명)보다 동아시아 3국이 적은(모두 2명 미만) 패턴이 보였다. 그러나 한국 청년의 경우에도 희망 자녀 수 평균이 남성 1.97명(중국 1.61명, 일본 1.92명), 여성 1.61명(중국 1.56명, 일본 1.78명)으로 중국이나 일본보다 그리 적은 편이 아니었고 최근(2021년) 합계출산율(0.81명)보다는 월등히 높았다. 일단 결혼을 하게 되면 아이를 1명보다 많이 낳고 싶어하는 청년들이 많다는 것은 출산의 자연적 동기가 현저하게 소멸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암시한다. 그만큼 한국 사회에서 출산의 자연적 동기를 제약하는 요인들이 무겁게 다가온 것이다.

예산제약 관련 원인: 출산의 명시적·암묵적 비용

이제 자녀를 갖고 싶은 마음, 즉 아이로부터 효용을 얻는 선호를 가진 경제주체가 맞닥

2) 은기수·이윤석(2005). 한국의 가족가치에 대한 국제비교연구. 한국인구학, 28(1), 107-132.

3) 김희삼(2017). 4개국 대학생들의 가치관에 대한 조사. 한국개발연구원.

뜨린 최적화 문제에 예산제약을 도입해보자. 아이라는 재화와 노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밖의 다른 모든 재화(복합재)의 최적 조합을 선택할 때, 각 주체는 아이의 상대가격, 즉 아이의 출산과 양육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게 된다.

한국 사회에서 출산의 경제적 비용(즉 기회비용)에 포함되는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은 모두 높게 인식되고 있다. 10% 내외의 상위권 대학과 선망 일자리를 향한 일점집중형 경쟁에서 자녀를 승자로 만들기 위해 많은 한국 부모는 ‘고비용·고강도 양육(intensive parenting)’에 뛰어들게 된다.⁴⁾ 2017년 한국노동패널의 교육비와 생활비 자료를 토대로 육아부터 대학교육까지 지출한 금액으로 추정된 자녀 양육비용은 중위소득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자녀 1인당 3~4억대였다. 2017년 3인가구 중위소득(월 364만원) 수준에서는 양육비용이 3억3469만원, 4인가구 중위소득(월 447만원) 수준에서는 양육비용이 4억5918만원 지출된 것으로 추정됐다. 4인가구가 자녀 2명으로 구성된다고 보면, 2명의 양육비용을 대기 위해서는 중위소득 가구가 17년간의 총소득을 모두 자녀 양육에 쏟아부어야 하는 셈이다. 웬만한 경제력을 갖지 않으면 2자녀 이상을 낳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준다. 더욱이 월 600만원 이상의 소득을 가진 가구의 경우 자녀 1인당 양육비용이 9억9479만원으로 추정된 점을 고려할 때, 평범한 부부가 미래의 자녀에게 고액의 사교육이라도 시키고 싶다면 감히 아이를 낳아 기를 엄두가 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직접 지출한 명시적 비용 외에 자녀 양육으로 인해 포기된 시간과 기회를 고려한 출산의 암묵적 비용도 무시할 수 없다. 2014년 통계청 생활시간조사에서 여성의 ‘가족 및 구성원 돌보기’ 시간은, 아이가 없으면 일평균 1시간 7분이지만, 아이가 있으면 3시간 28분으로 3배 이상 증가한다. 반면 ‘교제 및 여가 활동’ 시간은 4시간 39분에서 2시간 59분으

로 줄어든다. 육아 때문에 경력이 단절된 경우의 미래소득 상실까지 고려하면 금전 측면의 암묵적 비용도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출산의 명시적·암묵적 비용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사용해 2010~2019년의 가구특성별 출산율 변화를 살펴본 결과에서도 확인된다.⁵⁾ 소득수준을 상·중·하의 3분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소득이 적을수록 출산율도 낮고 출산율 하락률도 컸다. 100가구당 출산가구 수는 2010년에 소득 하위층 2.72, 중위층 6.5, 상위층 7.63이었고, 2019년에는 하위층 1.34, 중위층 3.56, 상위층 5.78로 나타났다. 동기간 출산율 하락률로 따지면 소득 하위층 51.0%, 중위층 45.3%, 상위층 24.2% 하락한 셈이다. 한편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출산율은 높지만, 출산율 하락률은 더 컸다. 100가구당 출산가수 수가 2019년에 고졸 이하 가구는 3.14로 동기간 11.6% 감소한 데 비해 초대졸 이상 가구는 4.12로 동기간 48.1% 하락한 것이다.

이러한 소득에 따른 출산율 차이와 그 변화는 출산과 양육의 명시적 비용 부담 능력 차이가 확대됐음을 의미한다. 또한 학력에 따른 출산율 차이와 그 변화는 학력이 높을수록 명시적 비용 부담 능력은 좀 낮지만 출산에 따른 암묵적인 기회비용이 더 커졌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물론 고학력자의 출산 관련 선호 변화에 따른 것일 수도 있고, 계층 대물림을 위한 교육 투자 부담이 더 커졌다고 느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마지막 가능성은 사교육 고참여 집단이 저참여 집단에 비해 사교육비 상승에 대한 출산율 하락 반응이 더 컸다는 분석 결과⁶⁾에 기반한 것이다.

청년들에게는 생존 중심의 각자도생 풍조 속에 출산을 핸디캡으로 느끼는 경향이 강해

4) 동아일보(2019.10.10.). 대한민국 양육 명세표.

5) 유진성(2022). 소득분위별 출산율 변화분석과 정책적 함의. 한국경제연구원 KERI 인사이트 22-04.

6) 박진백(2021). 주택가격과 사교육비가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과 기여율 추정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보장연구, 37(4), 65-92.

졌다. 출산하면 노동시장의 경쟁 및 생존에 불리하고, 돈과 시간이 더 부족해지고, 미래(노후)가 더 불안해질 수 있다는, 이른바 ‘3불(三不)’ 심리가 형성된 것이다.⁷⁾

2022년 올해로 정부가 저출산 대책을 추진한지 17년째지만, 출산율 반등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그런데 연간 60~70만명 태어난 1990년대생이 주출산연령대에 있는 향후 10년의 출산율 제고가 출생아 수 증대에 미칠 효과는 연간 40만명대 태어난 2000년대생이 주축이 되는 그 이후 10년보다 강하다. 출생아 수 회복의 마지막 골든타임인 10년 동안에 효용함수와 예산제약 요인 중 정책의 효과성이 검증됐거나 예상되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

효용함수 측면의 대응방안: 자연적 동기의 실현 지원

효용함수 측면에서는 출산의 경제적 동기나 사회적 동기보다는 자연적 동기의 실현이 쉬워지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전통사회에서처럼 자녀가 가구노동력이나 노후보장수단이 아니게 된 상황에서 출산의 경제적 동기를 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결혼과 출산 및 그 적령기에 관한 사회적 규범이 약화된 상황에서 이를 다시 강화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와 선택권 존중이라는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별로 가능하지도 않다. 극저출산으로 사회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으니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것을 새로운 사회적 규범으로 미는 것은 국가주의적이고 기성세대 중심적인 발상이며, 결정 당사자들에게 호소력도 약하다. 극저출산 시대에 아이가 미래 사회의 공공재적 성격 내지는 긍정적 외부성을 갖고 있다면, 남이 낳아 기른 아이에 무임승차하려는 유인이 있고, 정부의 지원 없이는 사회적으로 최적인 수준보다 출생아가 적을 것이다.

만약 사회가 아이를 존중하고, 아이 동반

성인을 우대하며, 아이 있는 가정들끼리 더 즐겁게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된다면, 이것이 출산의 새로운 사회적 동기가 될 수 있을까? 설령 그렇게 되더라도 그것은 아이를 갖고 싶은 자연적인 동기가 더 쉽게 실현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 것이지 규범이나 압력에 의한 사회적 동기의 제고로 보기 어렵다.

출산의 자연적 동기는 가족에 대한 좋은 기억이 많고 기대가 클 때 적극적인 출산 계획과 그 실천으로 이어진다. 청년세대의 기억에서 가정이 비교당하는 곳, 혼나는 곳이 아니라 화목하고 즐겁고 서로 돕는 곳이었을 때, 가족과 상대 성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형성될 수 있다. 최근 연애하지 않고 먹방을 보듯이 남녀 매칭 예능 프로그램을 보는 대리경험으로 만족하고, 배우자나 자녀 대신 손이 덜가는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20·30세대가 늘고 있다. 이성 간의 사랑에 대한 열의를 잃어가는 세대가 되지 않도록 본성에 충실한 자유연애를 자연스럽게 돕는 방안도 필요하다. 남녀공학의 잠재적 장점을 살리는 학교 운영, 학교 연합형 고교학점제를 통한 청소년의 교류 범위 확대, 혼외 출산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및 육아 지원 제고 등으로 출산의 자연적 동기를 높이는 등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보되, 당사자인 청년들의 머리와 가슴에서 나온 제안부터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다.

예산제약 측면의 대응방안: 출산의 기회비용 경감

출산의 자연적 동기를 가진 사람들이 최대한 그것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각자가 처한 예산제약의 완화, 즉 출산과 양육의 경제적 비용 경감이 중요할 것이다. 이는 출산에 대한 현금성 지원이나 공보육서비스 확충에 국한되지 않고, 성평등 제고, 지역편중 및 경쟁 완화 등 출산의 기회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가진 환경 변화를 포괄한다.

먼저 출산장려금, 영아수당, 아동수당, 무상교육 확대는 명시적 비용을 경감하여 예산제

7) 서형수(2022). 앞의 글.

약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각 정책에 대해서는 세부 프로그램 수준의 세밀한 효과성 분석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각 지자체별 자료를 일일이 수집해 지역별 출산장려금의 출산율 제고 효과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이미 출산을 계획한 가정이 지원금을 찾아다니는 효과도 일부 있었지만, 출산율 제고에 여전히 유의한 효과가 발견됐다.⁸⁾ 영아수당 지원은 월소득이 빠듯해 아이를 낳을 타이밍을 미루고 있는 신혼부부의 출산연령을 당기는 데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고, 초산연령의 감소는 둘째아이의 출산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보육을 가치재(merit goods)로 인식하여 의무(무상) 공교육과 같이 공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는데, 아이들 수가 현격히 줄어든 향후 상황에서는 추진해볼 만하다. 학교에만 부담을 지우지 않는 전일제 돌봄을 확대하여 초등학교 입학과 함께 찾아오는 돌봄 절벽을 해소하는 것 등은 육아의 시간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을 지원하여 유아교육·보육의 평균적 질을 높이고, 나아가 아동 발달에 있어 중요한 단계인 유치원 과정을 장차 의무교육으로 무상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기혼 및 유자녀 여성에 대한 직장에서의 불이익을 제거하고, 남성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는 것도 지속해나갈 필요가 있다. 가정 내의 가사·육아 분담에는 절대우위가 아닌 비교우위 개념을 적용하여 남성이 덜 못하는 것은 남성이 담당하는 효율적 분업을 도모하는 것이 현명하다. 가사·육아에서 경험을 통해 남성의 생산성이 높아질 가능성(learning by doing)까지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이는 결혼, 출산, 육아 및 가사로 인해 여성이 감당해야 할 암묵적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가구 단위의 총체적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길이다.

끝으로 이 글에서는 지면 제약으로 논의를 자제하고자 했지만, 일점집중형 과열 경쟁과

고비용을 초래하는 노동시장 격차와 수도권 집중 문제를 완화하는 과제는 어떤 개혁, 기획, 실행력으로 가능할까도 예산계약 완화 측면에서 고민되어야 한다. 출산을 꺼리게 만드는 부담스러운 ‘고비용·고강도 양육’과 ‘완벽한 후원자 부모’상을 대체할 수 있는 ‘적정한 양육’과 ‘적당히 관찮은 부모’상의 확산에도 결국 이 경쟁, 격차, 집중 문제의 체감도를 줄이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이다. **SIES**

| 약력 | 광주과학기술원(GIST) 기초교육학부 교수. 서울대 경제학과에서 학사 및 석사를 마치고,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및 인적자원정책연구부장을 지낸 바 있고,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6·7기 본위원, 국민경제자문회의 거시경제분과 위원을 역임했다.

8) Kim, H.K. and S-H Lee(2022). The Effects of Childbirth Grants on Population Migration and Fertility in South Korea. working paper.